

“尹, 혐의 인정 않고 반성도 없는데…형량 납득 안된다”

윤석열 체포방해 5년 선고…지역민 반응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징역 10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광주 시민사회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과정뿐 아니라 공무원의 사병화, 공권력 무력화 등 불법 사황을 열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지만, 정작 형량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며 구형량의 절반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는 등 감경 사유가 없었던 점도 비판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1월3일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헌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후 부서한 문서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며 허위 선포문을 작성·파쇄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일부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

구형량의 절반 선고 터무니 없어 반헌법적인 행위 비해 처벌 미흡 초범이라는 이유 감경 말도 안돼 체포 저지 동조한 국힘 의원들 같은 법리 적용 책임 추궁 지적도

정적인 계획 하에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판결을 지켜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획책한 데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라며 반발 의견이 쏟아졌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지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과 위법성, 그동안 법정에서 보여 온 태도를 고려하면 1심 선고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인다”며 “추후 항소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고,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판결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규복 광주전남총불행동 공동대표도 “체포 방해는 권력을 동원해 국가 기관 간 무력·유혈 충돌을 야기할 뻔한 중대 범죄”라며 “대통령 권력을 악용해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체포를 거부한 것을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 박승일(24·광주시 남구)씨는 “초범이라서 감경되는 건 말장난같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사 출신인데 초범의 여부가 아니라 법을 이

용했다는게 과심하다”며 “큰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 SNS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아무리 초범이어도 죄의 경도가 있다.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너무 아쉽다. 이게 나라냐?”고 되물었다.

또 스레드 등지에도 “체포방해 혐의 5년 선고는 무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맞은 느낌일지겠다”, “(비상계엄, 경호처 동원 체포방해 등)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인데, 초범이라는 게 양형사유가 맞는거냐”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행위가 불법으로 확인된 만큼, 체포 저지를 도왔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체포 방해는 단순한 개인 방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을 사병화한 중대 사안”이라며 “체포 저지를 도우며 적극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7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본안 사건’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무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병태군 여론조사 무상 수수’ 재판은 오는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영 기자 yoon@kwangju.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북부경찰, 80대 치매 노모 살해 60대 구속

80대 치매 노모를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장성군의 한 야산에서 80대 노모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광주시 북구 용두동 자택 인근에 세워진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 증상이 심해진 B씨를 홀로 부양하면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에서는 ‘형편이 힘들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신변을 비판하는 A씨의 메모가 발견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농사일을 도우며 생

활을 해 왔고, 치매 걸린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트럭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 적재함에는 이불과 생활 도구 등이 발견됐다.

지난 14일 경찰은 다른 지역에 사는 B씨의 자녀로부터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광주시 북구 용두동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긴급체포했고, A씨의 자택 인근에 세워진 1t 화물차 적재함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6일 발부받았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김건희특검,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 6년 구형

김건희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김건희특검팀이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내달 9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김 전 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및 4100만원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

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적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악취 민원 들끓었던 광주 SRF, 드디어 정밀조사 나선다

기후부·환경공단 1년간 실태 조사 남구 조사결과 바탕 저감대책 마련

광주 자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과 인근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조사가 추진된다.

광주시 남구는 이달부터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SRF시설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시설이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단의 전국 10개 악취 실태조사 대상 지역에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 남구는 지난해 잇따른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과 부적합 악취 판정 사례(광주일보 8월 8일자 7면) 등을 고려해 기후부에 관련 조사를 신청했었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남구가 각각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는 식으로 이뤄지던 기

존 조사와 달리, 올해부터는 정부 산하기관 주관의 정밀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악취실태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복합악취는 공기분석관능법에 따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해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시험법을 통해 측정되며,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들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도 도입될 예정이다.

조사당국은 사업장 현황 조사와 더불어 해당 지역을 악취 발생지역과 경계지역, 영향지역으로 구분해 대기질 측정, 악취 확산 모델링 등을 함께 진행한다.

조사는 1년동안 진행되며, 오는 12월까지 악취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과동 SRF 시설은 수년간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잇따랐으며 지난해 8월 법적 기준치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악취가 측정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9월 악취

저감장치 활성탄 흡착탑 추가 설치 및 에어커튼 설치, 악액세정탑 내부 충전재 전면 교체 등 조치를 시행하고 지난해 11월 설비 재가동에 돌입한 바 있다.

또 오는 6월까지 기존 악액 세정으로 악취를 저감해오던 방식을 소각 탈취 방식으로 변경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RF 악취개선 민관 합동 TF를 통해 추가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악취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광주시 남구 양과동 SRF 외에도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양돈단지, 춘양면 회송리 돈사 및 퇴비공장, 화순읍 양돈단지 및 삼천리 계사 일대 등 4곳에 대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